

# 李대통령 ‘국민경고’에 與 계파별 아전인수 해석 부분

## 지방선거발언 전대 영향축각

비당권파, ‘鄭에 불만’ 표시 주장하며  
“친명결집 시그널” 김총리 ‘명픽’ 부각  
친청계 “친명 vs 친청은 가짜 프레임”  
“전당대회에 대통령 끌어들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경쟁 모드로 급속히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지방선거는 국민 경고’라는 발언을 놓고 9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대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당권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전대에 미칠 영향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비당권파와 친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총리가 사실상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우회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를 “전국적인 승리”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전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김 총리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여당인 민주당의 노선과 관련, “끊임없이 지지 계층을 넓혀야 하며,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거론한 것도 비당권파는 주목하고 있다. 이 역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선명성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서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친명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정 대표가 국정 뒷받침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쌓인 불만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그널’을 계기로 의원들이 한쪽으로 모일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 초선 의원은 “저는 정 대표 지도부에게 이제 그만하라는, 연임 포기에 대한 메시지로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를 차기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당 대회 출마를 시사한 송영길 의원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전당 대회가 정청래 대 반(反) 정청래 구도로 짜이는 상황에서 송 의원이 나설 경우 반청 진영이 분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도부급 인사는 “송영길 의원이 전대에 나서면 삼자 구도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는 공교롭게 이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을 환송하는 자리에 정 대표 등은 불참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하는 ‘대조적 상황’에도 주목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친청 인사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그으며 파장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 평가와 관련, “당이 기본적으로 가진 선거에 대한 평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한 아쉬움, 미안함 등에 대해 이미 정 대표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라는 게 당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냐는 점에 대해선 (당내) 생각이 조금 갈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대는 출마 후보 간 경쟁”이라며 “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 친명 vs 친청을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지 말라”

고 지적했다. 친청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분열”이라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가 더 겸손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비당권파를 견제했다.

당내에선 계파간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이번 전대가 건강한 경쟁을 넘어 제 살 깎아 먹기식 다툼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 대표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정 대표의 공과에 대해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뒤 “기본적으로 특정 후보, 특정 세력이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의 리더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턱담”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출국장 金총리 나오고 鄭 안보여

靑 “국내상황 감안 환송인원 최소화”

일각 전대 앞 ‘정치적 함의’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지리하지 않은 건이례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리현, 지난 3월 싱

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공항을 찾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총리는 참석하고 정 대표는 나오지 않은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맞물린 관측이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손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기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뒤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與, 투표지 사태 국조 속도전...“특검도 열어놓고 협의”

“여야 신속 협의...법률 개정·개헌도 검토”

‘선거개혁TF’ 출범...‘원포인트 개헌’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

냥해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관위 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부정 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단장은 송기현 의원이 맡았으며 10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 일각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

##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무효’ 선거소청 접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8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 건강검진

##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